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미국, 전자제품 관세양허폭 축소

美 행정부는 日本이 미국산 목재 및 관련제품에 대한 관세무세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응,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시 제시했던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폭을 줄이기로 했다.

존 슈미트 美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목제품에 대한 일본의 관세부과는 양국간 통상 문제협의의 도출에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위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을 축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슈미트 부대표는 일본이 목제품에 대한 무세화를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중 미국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할 관세양허안에서 일본의 주력상품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종전의 관세양허 제한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세양허폭을 당초 계획보다 줄일 경우 일본전자업계는 對美 수출시 수억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슈미트 부대표는 이와함께 美·일간 관세인하문제는 지난해 UR협상시 거의 타결됐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목제품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 GATT, '반덤핑' 남발·301條 비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국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

표, 미국의 반덤핑 제소 과다 사용과 미 통상법 301조(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등과의 2개국간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미국과 여타 다국간의 무역시스템으로 양쪽 모두의 시장 개방 흐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문제시했다. 미국의 저축과 투자부족으로 야기된 무역수지 적자를 배경으로 앞으로도 미국내의 보호주의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지난 80년대 연평균 40여건이던 것이 90년 7월 이후에는 연평균 6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조사건수의 80%가 가결정 상태에서 유혈의로 인정됐으나 결국 46%는 최종 결정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등 가결정과 최종결정 사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결정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도 가결정 단계에서 과세를 실시, 수출을 실질적으로 단념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 무역상대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가트 회원국 대부분이 미 통상법 301조 등과 같은 미국측의 일방적 통상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 통상법 301조가 남발될 경우 제3국을 차별화하는 이른바 양국간 문제해결 방식이 만연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지난 91년 7월 이후 미 통상법 301조의 적용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3. 美, 日에 關稅인하撤回 통고

美통상대표부(USTR)의 캔터 대표는 21일 하타(羽田) 일본외상에 전화를 걸어 UR협상에서의 일본의 목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관세인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당초 약속한 일렉트로닉스제품 55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철회할 것임을 통고했다고 22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또 공식루트를 통해 “미·일 포괄경제협약이 결렬된 이상 미일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은 관세문제로 더 양보해야 한다”고 일본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타외상은 “교섭은 작년말에 이미 종료됐다”고 반론하면서 추가적인 관세인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소식통은 미국이 이제 GATT에서의 협상을 포괄협약이라는 미일간의 쌍무협상과 링크시킨다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함에 따라 UR의 관세문제는 4월의 모로코 각료 회의를 앞두고 파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캔터대표가 이날 갑자기 전화로 일본측에 강력히 요구한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목재제품이다. 그중에서도 합판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밖에 종이·펄프, 진 등 증류주의 일부, 비철금속의 일부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측이 관세인하철회를 표명하고 있는 일렉트로닉스제품 55개품목은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비중이 높은 제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일본정부의 시산에 의하면 대상품목의 대미수출액은 총80억달러에 달하며 그 관세액은 1억2,000만달러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선진국 CFC사용중단조치 미룰듯

미, 유럽 등 선진국의 염화불화탄소(CFC) 사용중단조치의 시행이 예정보다 훨씬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환경보호국(EPA)은 내년에도 CFC 생산을 계속해 줄 것을 미 듀폰사에 요청. CFC사용중단이라는 국제적인 합의 이행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ICI사 등 유럽화학업체는 미정부측의 움직임이 의심스럽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듀폰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럽화학업체들은 국제협약에 따라 CFC생산중단을 전제로 CFC대체물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왔다.

국제환경보호관련 협약하에 선진국들은 금년부터 CFC사용을 3줄이기 시작해 내년에는 지난 '86년 수준의 25%로 감축하고 또 '96년 초부터는 사용을 완전 중단키로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내년중 CFC사용량 한도를 '86년의 15%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일부 미국 및 유럽화학업체들은 CFC생산공장 폐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듀폰의 경우 금년말까지 선진국내 CFC생산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5. 일본, 통산성서 저작권 새법안 마련

일본 통산성은 향후 자국의 정보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멀티미디어 분야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사용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영상 및 음성 등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정보센터를 신설,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등록된 기존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 및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서둘러 자국 문화청에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이 복수의 저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저작권 사용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산성 구상대로 이루어질 경우 멀티미디어 보급에 단단한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기존의 음악 및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컴퓨터의 사용으로 자유롭게 가공·변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가령 화면의 색상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서로 다른 화면들을 연결하는 등 원래 소프트웨어의 색상이나 기능을 바꾸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기술진보에 따라 적용범위가 특히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작품의 소재인 음악·영상물 등은 현재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자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각양각색의 저작물을 조합시켜야만 하는 특성이 있어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저작자 전원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협상을 하는 등 비용과 시간상의 낭비가 심했다.

이번 통산성 법안에는 디지털 정보 센터에 저작자들로 하여금 임의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게 하고 사용 희망자들은 이곳에 비치된 일람표에서 이용 가능한 저작권의 종류와 사용료를 알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납입한 사용료를 디지털 정보 센터가 저작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권을 찾아다니는 손실을 줄인다는 방안이다.

또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아닌 경우 자유롭게 이를 변경·가

공할 수 있게 하고 저작자가 명예를 실추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원에 이의 증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일본, 국제규격 통일 제휴

일본의 소니, 미쓰비시(삼능)화성, 미국의 IBM, 3M 등 4개사는 차세대 제품인 5.25인치 광자기 디스크와 디스크 구동장치의 국제규격 마련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 기업은 이미 규격안을 마련, 미국의 표준화단체인 미국 규격협회(ANSI)에 이를 제출했다. 오는 7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도 이를 제출, 빠르면 '97년 1월중으로 ISO 규격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4개사가 제출한 표준 규격안에 따르면 광자기 디스크의 기억용량은 현행의 2배 규모인 2.6기가바이트이다. 이들 4개 메이커들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규격통일을 달성, 제품개발 및 장치 보급환경을 정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들 4개사가 규격안을 마련한 것은 5.25인치 광자기 디스크와 관련 구동장치, 정보를 읽거나 쓰는 광자기원으로 현행기종에서 사용중인 적외선 반도체레이저보다 파장이 짧은 680나노미터의 적색 레이저를 채택한다. 레코드 트랙의 폭도 종전의 1.39미크론에서 1.15미크론으로 줄인다.

기록재생 방식으로는 종전의 마크 포지션 방식에서 벗어나 마크 에지 방식을 채택한다. 여기에 디스크의 내부반경과 외부반경에 무관하게 동일밀도로 기록가능도록 해주는 현행의 ZCAV 기술을 결합, 현재보다 2배의 대용량을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구동장치는 2.6기가 바이트 디스크 읽기 및 쓰기가 모두 가능하며 종전의 1.3기가 바이트, 650매가 바이트의 디스크 읽기도 가능하다.

이들 4개 메이커들은 이번 규격통일 작업이 자신들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디스크 메이커들

과 구동장치 메이커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97년 초에는 ANSI와 ISO 규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규격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각 기기메이커들의 개발이 쉬어질 뿐 아니라 다른 기종 메이커들간의 소프트웨어 호환성도 높아지게 된다.

광자기 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휴대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억용량이 크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기억매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5.25인치 광자기 디스크의 제1세대 제품은 기억용량 650메가 바이트 제품이다.

현재 이보다 상위기종으로 소니 등 몇몇사들이 규격을 제정한 1.3기가 바이트급 제품들과 히타치(일립) 제작소 등이 규격마련한 2기가 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규격을 마련한 기종은 1.3기가 바이트급 제품의 차세대 기종으로 세계 최대급의 용량이다.

7. 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 덤핑 재심가능성 높아

금년 6월 EU의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국산 비디오테이프가 반덤핑 재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화학제조업자 연합(CEFIC)은 한국 및 홍콩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재심 요구서를 지난 4일 EU 집행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이에 따라 이 건을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인 반덤핑위원회에 상정. 향후 수개월내에 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반덤핑규정 소멸시효조항(Sunset Clause)에 의거, 재심요청이 없을 경우 한국 및 홍콩산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실시후 5년이 되는 '94년 6월에 자동소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CEFIC의 제소에 따라 '89년 6월 코

오롱에 2%, 금성사에 2.9%, 홍콩산에 4.9~21.9%의 확정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해 오고 있다.

국산 비디오테이프의 대EU수출은 지난 '91년 1억3390만달러, '92년 7496만달러, 지난해에는 11월말현재 5760만달러 등으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8. 폴란드, 600개품목 관세조정

폴란드가 컴퓨터산업 진흥을 위해 부품의 면세쿼터를 대폭 증액하는 등 관세체계를 조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공 바르샤바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총1만1,680개품목중 600개의 관세율을 조정, 폴란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에 대해선 영세율적용 또는 관세인하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승용차 및 트럭의 관세를 EU(유럽연합) EFTA(유럽자유무역협정) CEFTA(중구자유무역협정,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국가를 대상으로 종래의 35%에서 30%로, 종축용 산동물용 14%에서 3.5%로, 물고기 사료를 20%에서 0%로, 포도주를 17ECU에서 헥토리터당 7ECU로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전자제품중 라디오 및 테이프레코더와 농산물중 딸기의 관세율은 각각 15%에서 30%로, 20%에서 40%로 인상했다.

폴란드가 올해부터 관세체계를 조정시행하고 있는 것은 EU, EFTA, CEFTA 등 인근 경제권과의 무역자유화협정 일정에 따른 해당 지역 관세조정, EU 관세율체제와의 합치, 상품 가공도에 다른 관세율조정등 필요성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폴란드의 관세율체제는 MFN지위 부여 여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MFN 적용 기본관세율 △GSP세율(기본관세율의 70%, 41개 개도국) △영세율(47개 저개발국) △자율관세(MFN 지위 미부여, 기본관세율의 2배, 단 기본관세율이 제로일 경우 25% 적용)

의 4컬럼으로 분류 시행해 왔으나 EU, CEFTA, EFTA 등 인근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경제권에 대한 감면 관세를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4개 관세적용 컬럼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별도 관세율 컬럼을 추가했다.

9. 동구, 전화사업 민영화 박차

동유럽과 구소련국가들이 전화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헝가리에 진출한 독일텔레콤은 향후 동유럽의 전화사업 민영화프로젝트가 약 30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동유럽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헝가리에선 독일텔레콤과 미 아메리텍의 합작회사 마절콤이 프랑스텔레콤과 이 STET를 제치고 국영통신공사 METAV의 주식 30%를 취득했다. 서방기업이 동유럽 공중회선전화사업에 진출한 것은 마절콤이 처음이다.

마절콤은 '90년대말까지 40억달러를 투자, 가입자수를 현재의 150만회선에서 380만회선

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비즈니스용 통신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체크에서도 국영통신공사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통신공사 SPT텔레콤은 올상반기부터 가을까지 27%의 주식을 매각키로 했다. 입찰을 통해 자본참여자가 결정될 것이나 독일텔레콤·프랑스텔레콤·아메리텍 등이 주식매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폴란드에선 지난해 통신공사 TPSA가 통신부산하 전화사업부에서 정부 100% 출자회사로 전환됐다. 이같은 변신이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수 없으나 '95년이후엔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통신공사 슬로박텔레콤의 민영화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97년이후부터 민영화 추진될 전망이다.

구소련에선 독일텔레콤이 미 AT&T·네덜란드PTT텔레콤과 공동으로 전화회사 UTEL에 자본참여했다.

이밖에 불가리아·루마니아 등도 민영화를 구상하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